

초등생 등·하굣길 더 안전해진다

전주시, 내달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강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정월 여론 등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7건(9명 부상)에서 지난해 12건(18명 부상), 올해 3건(4명 부상)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없애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늘어나고, 단속 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된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이 실시되고, 점심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40대(완산구 20대, 덕진구 20대)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무인단속장비 성능 개선을 완료했으며, 현재 문자알림기 입자 일괄 문자발송, BFT(버스정보시스템) 홍보, 현수막 게시, 계고장 발부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내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 설치되는 무인단속장비에도 변경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단속구간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3억 8500만원을 들여 3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한데 이어, 내년에도 13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녹색어머니회 등을 통해 조사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많은 4억원을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도색 △안전펜스 보수·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강화된 무인단속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장병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주변 원룸이나 주택이 주민들의 주차불편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시행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학대 피해 아이들을 위한 '희망 도서'

전북경찰청, 청소년 권장도서 500권 아동보호기관에 전달

전북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희망 도서를 전달했다.

경찰청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 권장도서 500권을 기증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및 보호, 치료 등의 활동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에 대한 면담 시 희망 도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4개소에 위치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책을 기증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산업 생태조사와 간행물 유행성 여부를 심의하는 공



공기관으로 매년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 도서를 기증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 진행돼 각 분야의 아동학대 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조용식 경찰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대피해 아동에게 희망 도서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26일 효자동 황방산 일대에서 지난 8월부터 추진해온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6·25 민간인 희생자, 70년 만에 밝은 곳으로

전주시, 황방산 일대서 유해발굴 중간보고회... 최소 30여 개체 유해·유품 발굴

전주시가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한국전쟁 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유해발굴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최소 30여 개체의 유해와 유품 등이 발굴됐다. 시는 발굴된 유해와 유품에 대한 감식 등을 거쳐 민간인 희생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안치할 계획이다.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성덕)은 26일 효자동 황방산 일대에서 지난 8월부터 추진해온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

졌다.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6~7월 인민군이 전주에 진입하기 직전 전주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형자 1400여명이 효자동 황방산 및 산정동 소리개재 등에서 집단으로 학살돼 매장된 사건이다.

시는 그간 전주대학교 박물관 조사팀과 함께 전주형무소사건 희생자 유가족 및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유해발굴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두개골과 치아, 다리뼈와 팔뼈 일부 등 최소 30여 개

체의 유해가 확인됐다. 또, 희생 당시 사망자가 입고 있던 의복의 단추와 신발굽, 벨트 등의 유품도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당시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M1소총 및 권총의 탄피, 총기의 탄두 등의 총기 관련 유물도 확인됐다.

발굴을 담당한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실장은 이날 "유해발굴을 통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며,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날 무시해?" 단골 술집 여사장 흥기로 쪼른 50대 항소심 실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단골 술집 여사장을 흥기로 쪼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재판부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9시47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사장 B씨(54·여)의 복부를 흥기로 쪼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부터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자주 다니며 앞선 1월과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주점의 유리창을 깨뜨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살해까지 하려고 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가정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전주시청소년문화센터는 26일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전북대학교 일대에서 '성폭력 OUT! 행복한 세상 ON!'을 주제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홍보 △관심 On 도장 찍기 △성폭력, 가정폭력을 잡아라! 두더지 게임 △따뜻한 말 한마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김윤상 기자

홀로어르신 위한 성금 전달

전주지역 초등학생들이 알뜰시장 수익금을 홀로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기부했다.

전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전주효문초등학교(교장 이평기)에서 교내 알뜰시장을 개최하고 얻은 수익금 100여만원을 홀로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센터에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 기탁된 성금은 형편이 어려운 홀로어르신 35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식품꾸러미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평기 전주효문초등학교 교장은 "효문초등학교 알뜰시장을 통해 학생들은 아나바다운동을 실천하고, 행사 수익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기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역 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이용객들이 라운딩을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경제사절단, 전주 방문

28일까지 전주지역 기관 방문

전주시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과의 국제교류에 나섰다.

시는 26일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정치·법률자문위원장과 국회의원, 국립은행장 및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10여명의 고위공무원과 경제사절단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고위공무원들의 이번 전주 방문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전주대학교 LINC 플러스사업단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방문단은 김승수 전주시장을 면담하고, 전주대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을 방문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키르기스스탄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가 전주를 찾는 등 전주시와 문화 및 농업분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국장은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한국어전공이 개설되고 K-POP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등 많은 키르기스스탄사람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전주가 세계적인 여행매거진인 론리플래닛이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 3위로 선정되며 글로벌 도시로 부상한 가운데,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국제교류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연간 4회 법규 위반시 버스운수자격 취소

전주시,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정착 위해 처벌규정 강화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행위가 연간 4회 적발된 버스운수종사자는 버스운수자격이 취소된다. 이는 전주시가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전자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대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전으로 모범이 되는 친절·안전운전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법령을 위반하고 운행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1년에 4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자에 대해서는 버스운수자격 취소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통해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시내버스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먼저 시는 버스운전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이달의 친절·안전기사'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달의 친절·안전기사로 선발된 운전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회사로부터 50여 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이 지급되며, 연말에 친절·안전기사 왕중왕을 선발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등 친절·안전기사에 대한 포상을 대폭 늘렸다. 현재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선발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의 추천과 시민 제보 등을 종합해 선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선발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5명의 친절·안전기사가 선정됐다.

동시에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시는 △무정차(승

하차전 출발, 승차하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 △승차거부 및 중도 하차 △개문 출발 △제복미착용 △차내 흡연 △운송수입자 지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운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미한 민원의 경우엔 소속 버스회사에 민원 사항을 통보하여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원이 위반행위를 또 저지른 경우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1일2교대를 통해 친절 서비스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1일2교대제는 버스운전원이 매일 9시간 가량 운행하는 제도로, 시행되면 버스운전원의 피로누적이 덜하기 때문에 친절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내년 자전거축제, 전주서 개최

시, 4월 24~25일 행안부와 공동으로... 대행진 등 행사 다채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축제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4월 24일과 25일 전주시 일원에서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2020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은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6월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자전거의 날 공동개최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 25일 전주시를 공동개최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간 진행되는 2020년 자전거의 날 행사에서는 자전거의 날 기념식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어린이 안전 체험 페스티벌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자전거 대행진 퍼레이드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문

화공연 △체험부대행사 등으로 알차게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에 전주가 공동개최 지자체로 선정된 배경에는 지난 2017년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한 후 각종 전문적인 자전거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교통통제 △안전유지 △유관기관 협력 등의 노후를 축적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시가 △자전거 안전교육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10월에 개최된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1,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전주 시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이 공동개최 지자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후문이다.

장병호 시민교통본부장은 "2020년 전주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하는 자전거의 날 행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주가 생태교통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퍼레이드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문